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법안 관련 일본 내외 반응 분석

오영택 주임(정책기획팀, staroh@nia.or.kr)

◈ 최근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일본 내에서 일부 단체의 **긍정적 의견**과 일본경제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 입장**, 그리고 법안 도입에 따른 **민관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제안 등 다각도의 반응 표출

◈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 속 **주요국 간 견제 양상**과 각국 산업계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대두

1. 일본 언론 및 단체 반응

□ WIRED JAPAN : EU의 AI 법안은 세계적 표준이 될 것으로 전망[1]

o 언론사 와이어드 재팬(WIRED JAPAN)은 EU의 AI 법안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국제적 기준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 보도('21. 4월)

- 안면인식 기술 등의 고위험 AI 기술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이용도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규정상의 한계도 있다고 지적

  * 사법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인물을 찾는 경우, 3년 이상의 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경우 등

- 규제의 내용은 막연하나 감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분야에 대해 기업의 투자를 막음으로써 AI 업계가 나아가야 할 지침을 제시했다고 평가

o 미국과 중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EU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므로 국제사회의 주목이 예상

- 현재 미국, 중국 등의 글로벌 ICT 기업*이 제공하는 AI 제품 및 서비스는 대부분 EU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수

  * 미국의 클리어뷰 AI(Clearview AI), 중국의 알리바바(阿里巴巴) 등

- 과거에 제정된 EU의 규제가 다른 국가의 규제에 영향을 주었던 것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다른 규제 당국으로 이어져 특정 행동*의 억제로 이어지리라 판단

  * 성별, 나이, 인종, 성적 지향, 정치적 지향 등의 생체적 특징에 따라 사용자를 분류하는 경우 등

1) WIRED(2021. 4. 26.), 欧州が提案した「AI規制」の流れは、世界へと波及する可能性がある

□ RIETI : AI 윤리 측면에서 AI 법의 중요성 역설[2]

o 일본 경제산업연구소(RIETI)는 AI 법안을 참고하여 AI 윤리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필요성을 주장('21. 4월)

- AI가 전기와 같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AI 윤리에 있어 AI 법안에 대한 신속한 논의의 중요성 조명

o 고위험 AI 기술이 금지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고, 고위험 AI에 대한 명확한 규제 필요성 강조

* 고위험 AI는 오류가 없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하나, 때에 따라 오류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고위험 AI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음

- 특히, EU의 AI 법안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위험성을 가진 AI 기술*에 대해서 규제의 필요성 피력

* SNS 등의 정보를 추출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기술 등

□ JETRO : AI 법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과 AI 정의의 모호함 지적[3]

o 일본무역진흥기구 제트로(JETRO)는 유럽 내 ICT 산업단체의 의견 중 AI 법안 프레임워크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에 초점('21. 4월)

- ICT 관련 산업단체 '디지털 유럽(DIGITAL EUROPE)'은 고위험으로 분류된 분야에 기업가의 사업 진입이 줄어들 가능성을 피력하며, 규모가 작은 기업이 규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간소하고 합리적인 지침과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

- 유럽엔지니어링 산업협회 '올가림(Orgalim)' 역시 'AI 시스템'의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함을 언급하며 적합성 평가 인증 의무화는 안전성을 높일 수 없고, 기업의 부담감을 늘릴 것이라 강조

o AI에 대한 정의를 공통화·명확화하는 것이 민관협력에 있어 중요함을 시사

- 유럽 소비자 협의회(ANEC)는 새로운 정책 접근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 제시

- AI 제품, 서비스 이용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지키기 위해 정확하고 명료한 기준을 따라야 함을 주장

---

2) RIETI(2021. 4.26.), AI規制は時期尚早か？「EUによる規制法案から考えるAI倫理」
3) JETRO(2021. 4.28.), 欧州産業界、欧州委のAI規制法案への要望や危惧を表明

□ InfoCom : 일본 정부의 정책 노선 재고 필요성 강조[4]

o 일본 정보통신종합연구소(InfoCom)는 유럽 내 AI 관련 단체의 부정적인 의견을 주로 부각하고, 정부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리포트를 발표('21. 5월)

- '디지털 유럽(DIGITAL EUROPE)'은 인공지능 관련 '고위험'의 정의를 정확하게 할 필요성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EU 인공지능 법 준수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 표명
- '올가림(Orgalim)'은 EU의 AI 법안이 신기술에 대한 엄격한 규제이며 디지털 사회의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

o 일본 사회 내에서도 EU의 AI 법안에 대해 대표 언론뿐만 아니라 지방 언론에서도 이슈로 떠오르는 등 기사 보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

- 가장 대대적인 보도를 한 일본경제신문은 "EU가 규제 절차를 밟는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라고 보도하며 글로벌 패권 경쟁 과정에서 주요국 간 국제적 표준 확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음을 피력
- 요미우리신문은 EU가 유럽-미국-일본 공조를 통해 세계 공통의 인공지능 법 프레임워크를 주도적으로 만들고자 함을 보도

o AI 법안이 국제 표준안으로서 채택된다면, 일본 정부의 정책 방향도 변화할 가능성 시사

- 기존 일본 정부의 AI 원칙은 디지털 혁신을 저해할 우려로 인해 정부 규제*가 아닌 자주 규제**를 준수

* 정부 차원의 법적인 규제

** 법적 규제가 아닌, 국제 공조 가이드라인 수준의 자주적 대응

- 그러나 일본 정부가 그동안 글로벌 AI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온 점을 고려하면, 정부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AI 법안이 정부 규제로서 역할을 한다면, 프레임을 따라가지 않는 나라만 기술적으로 더 앞서나갈 수 있음을 우려
- 국제적 공조 및 원칙 준수와 디지털 혁신 가속화 사이에서 일본 정부의 정책 노선 재고 필요성 강조

4) (株)情報通信総合研究所(2021. 5.31.), 報道から見る欧州AI規則案の日本での受容と影響

□ 일본경제단체연합회 : 디지털 혁신과 국가 안보 저해 우려[5]

o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법안의 도입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21. 8월)

- 금지 혹은 고위험 AI의 정의 등에 관한 모호함은 투자 의욕을 위축하고 신흥 AI 기업 등의 육성 및 강화를 방해하여 혁신과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

- 법안 도입 후에도 법안의 내용을 지속적이고 유연하게 투명성을 가진 구조로 재검토해 나가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필요성 강조

[참고] AI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한 개별 의견 제시

- 금지 및 고위험 AI 대상 범위를 더욱 세부적으로 좁히고, 위험도 측정 및 평가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함

  ※ 법안에서 금지하는'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Reasonably foreseeable misuse)'의 경우, 적절한 안전관리가 시행되었다는 전제하에 악의를 가진 주체의 공격으로 인한 오용이라면 면책해야 함

- AI의 판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AI가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도움을 주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명확하게 대응해야 함

  ※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공급 후 AI 모델이 변화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AI 이용자의 악의적인 사용 및 사전 안내된 주의사항 범위 내의 오용은 해당 AI 사용자에게 책임이 부과되어야 함

- 의료기기 규제를 비롯하여 기존의 규제 및 제도로 충분한 제삼자 인증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과도한 추가 규제를 삼가야 함

- 고위험 AI의 적절한 활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을 위해, AI 공급자가 어디까지의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함

- 데이터 보호에 관해 각국이 정하는 법을 준수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분석·이전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글로벌 데이터 유통 기반 기술* 등의 활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등의 데이터 보호법에 규정된 비밀성·기밀성이 높은 데이터의 이전을 위한 처리를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자동 설정·실행하는 기술

- 'AI 설계를 위한 교육과 검증 및 시험 데이터셋에는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법안 내용에 대해 편견을 발생시킬 위험 상존

  ※ 글로벌하게 통일된 데이터로 학습하는 것을 방해하고, 고유의 특성·요소를 평가하는 행위 자체가 편견을 발생시킬 수 있음

- 'AI 시스템이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인증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라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기밀 유지의 관점에서 산업계를 포함한 거버넌스와의 충분한 추가 논의 필요

- 고위험 AI가 사용자에게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AI(eXplainable AI, XAI)*'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 AI 스스로 내린 결정이나 답의 메커니즘을 사람이 이해하는 형태로 설명하고 제시할 수 있는 AI

- 법안의 고위험 AI에 대한 감독 의무 내용 관련, 인간의 관여 정도가 낮아도 독립된 안전 계통에 의해 위험 요소가 배제된 AI나 인간의 행동에 비해 편견이 없고 정밀도가 높은 것이 증명된 AI는 해당 요건을 제외 또는 완화해야 함

5) 日本経済団体連合会(2021. 8. 6.), 欧州AI規制法案に対する意見

- 적합성 평가가 EU 관외 기업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관외 기업이 AI 법안과 관련하여 당국과의 사전 상담 및 공적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조기에 구축해야 함
- AI 개발 소스 코드는 기업에 있어서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규제 당국이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갖는다면 AI의 개발과 도입이 위축될 수 있음

  ※ 일·EU EPA(일·EU 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소스 코드의 접근 요구가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함
- 제재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벌금이 고액인 점은 유럽 시장에서 기업의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위반 유형과 내용, 얻은 편익의 크기, 악의 유무 등에 따라 적절한 페널티를 정해야 함
- 인권침해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고위험 AI에서 제외해야 함

  ※ 생체 식별 및 분류에 대해 식별이 차별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명확할 경우 등

□ GIGAZINE : 생체 인증 감시 시대를 도래시킬 위험성 언급[6]

o 일본 언론사 기가진(GIGAZINE)은 EU의 AI 규제가 역으로 '새로운 생체 인증 감시 시대'를 도래시킬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소개('21. 6월)

- '심각한 범죄와 싸울 때는 예외적으로 AI 사용을 인정한다'라는 조항이 문제로 대두
- 구글 CEO 선다 피차이(Sundar Pichai)를 시작으로 'AI는 규제되어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유럽 비영리 단체 액세스 나우(Access Now)는 법안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발표

o 액세스 나우의 애널리스트 다니엘 루퍼(Daniel Leufer)는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AI를 적절히 금지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법안의 허점에 조명

- GDPR이 제정된 이후 대부분의 나라에서 같은 내용의 데이터 보호 규칙이 채택된 점을 들며, EU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AI 법안을 통과시키면 다른 나라에까지 구멍이 전이될 가능성 주장

  ※ 특히 브라질이나 인도와 같이 치안이 좋지 않고 국민의 디지털 사생활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법의 구멍으로 인해 규칙이 남용될 우려를 표명
-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안면인식 기술은 유색인종일 경우 정확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기술 운용 중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피력

6) GIGAZINE(2021. 6.10.), AI規制が逆に「新たな生体認証監視時代を到来させてしまう」という主張

□ TechCrunch Japan : 혁신과 규제 동시 실현의 방향성 제시[7]

o 기술 산업 언론사 테크크런치 재팬(TechCrunch Japan)은 AI 혁신과 규제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칼럼 소개('21.10월)

- 칼럼 집필자인 미국계 AI 스타트업 CEO 윌 어핑턴(Will Uppington)은 미국의 전기차(EV) 인센티브를 좋은 사례로 언급

※ 미국의 기업평균연비 기준(CAFE, 한 기업이 당해 연도에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규제하는 제도)에 의한 규제는, 시장 경쟁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판매 증대로 이어짐

- 미국이 EV 생산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에는, 규제가 효율적인 제품 개발의 동기로 작용해 혁신을 촉진했기 때문이라고 강조

o 미국의 EV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AI 법안에 대응한 세 가지 추진 전략 제시

1) **(인센티브 제공)** 새로운 법안에 적용되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구축 또는 구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일부 은행에서 사용하는 AI 기술은 개인의 신용도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고위험 AI에 해당하나, 이는 은행 업무에 편견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개인의 신용도를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대처이며 정부와의 공통 목표인 포용금융(Financial Inclusion,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책)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AI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음

2)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AI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과 AI 사용자 그룹이 협력하여 법안을 준수하기 위한 실용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함

※ 싱가포르 금융관리국은 은행, 보험회사, AI 기술 공급자를 위한 업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FEAT(Fairness · Ethics ·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공정성 · 윤리 · 설명책임 ·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3) **(자금 제공)** 법이 요구하는 AI 품질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제공을 검토함으로써, 혁신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두 가지 목적 달성

---

7) TechCrunch Japan(2021.10.23.), 【コラム】AIイノベーションの推進と規制を同時に実現するために欧州委員会はどうすればよいのか

□ J-CAST : EU가 AI 법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 보도[8]

o 일본 언론사 제이캐스트(J-CAST)는 AI 법안 발의의 배경에 AI의 이용이 인권을 위협한다는 점이 작용했음을 언급('21. 5월)

- 흑인 피의자에 대한 백인 경찰의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2020년 IBM,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대기업이 경찰 측에 안면인식 기술의 제공을 중지한 사례가 있음
-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 기반 감시 시스템이 독재국가나 권위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감시에 활용되는 등 국제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

※ 중국 정부는 IT 기업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광범위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AI를 이용한 안면인식 기술을 위구르족 감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됨

□ NIKKEI : AI 법안 대응을 위한 기업의 XAI 주목을 소개[9]

o 일본경제신문(NIKKEI)은 일본 기업들이 규제 강화 대응의 일환으로 '설명할 수 있는 AI(XAI)'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내용을 조명('21.12월)

- AI 스스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은 복잡하므로 사용자가 시스템의 판단 기준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알고리즘의 편향이 간과될 우려 존재
- 판단 기준이 불투명한 알고리즘, 질이 나쁜 데이터, 편향된 모델이 규제 강화에 따라 초래할 손실과 위험한 사태에 대한 대비 강조

※ 미국 IBM은 6,200만 달러를 투자한 AI 의료 프로젝트의 학습 데이터가 오래된 데이터임을 이유로 당국의 임상 이용 승인을 받지 못함

- XAI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AI 개발 라이프사이클 각 단계의 편향을 줄여 AI 법안 대응 필요성 주장

8) J-CAST(2021. 5.14.), EUがAI規制案、世界標準を狙う　市民の権利保護と企業への投資呼び込み促す
9) 日本経済新聞(2021.12. 6.), 「説明可能なAI」に企業が注目　欧州規制案などに対応

2. 일본 외 주요국 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

□ 미국도 EU의 AI 법안과 같은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10]

o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미국도 EU의 AI 법안과 같은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

-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실(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Office) 국장인 린 파커(Lynne Parker)는 규제가 혁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임을 언급
- 기술은 신뢰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고, 신뢰는 거버넌스, 규제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으므로 올바른 규제는 실제로 혁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음을 주장
-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일관성 있게 논의해야 함을 피력

□ 글로벌 IT 기업가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 표출[11]

o AI 법안이 혁신 가도를 달리고 있는 AI에 한계를 둘 것이라는 비판과, 개인정보가 강력히 보호되면서 대중들이 AI를 보다 신뢰할 것이라는 의견 등 대두

글로벌 IT 기업가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

- 미국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베터클라우드(BetterCloud)의 최고정보책임자 토미 도넬리(Tommy Donnelly)는 "세계적으로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판로를 계획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안은 향후 유럽 기술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
- 그러나 미국 금융회사 싱크로니 파이낸셜(Synchrony Financial)의 최고정보책임자 캐롤 주엘(Carol Juel)은 EU의 AI 규제 조치가 "당연한 것"이라며, "EU의 GDPR 덕분에 미 입법자들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언급
- 덧붙여 "법이라는 규제 틀을 정립해 놓지 않으면 AI 기술이 보편화될수록 더 큰 피해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
- BSA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의 크리스티안 트론코소(Christian Troncoso) 정책책임자는 "경험상 기술에 대해 이처럼 명확한 규정이 있을 때마다 사업하기가 오히려 더 쉬웠다"라고 언급

10) FORTUNE(2021.11.10.), White House A.I. director says U.S. should model Europe's approach to regulation
11) AI타임스(2021. 4.26.), "실망스럽다" vs. "당연하다" 의견 분분... 유럽연합, AI규제안 발표 후 글로벌 기업 반응은?

□ AI 법안은 혁신적인 유럽 기업들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12]

o 파리 정치연구소 연구위원 라이언 나빌(Ryan Nabil) 박사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AI 정의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주장

- EU의 추산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고위험 AI 제품 하나를 도입할 경우 최대 40만 유로의 규정 준수 비용을 부담
- 그러나 법안의 고위험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해 이들 부문이 합쳐지면 EU 전체 GDP의 약 35%를 차지하고, 유럽에 대한 AI 투자를 약 20% 줄일 위험
- 규제 준수 부담 증가로 혁신적인 기업들과 인재들이 더욱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가진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같은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 언급
- 기술 혁신에서 중국과 미국에 밀리면서 더 많은 혁신과 투자가 필요해지는 역효과 우려

□ AI 법안을 주요국 견제를 위한 EU의 전략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13]

o 미국,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AI 기술에 EU가 AI 법안을 통해 국제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는 평가

- 이미 확보한 막대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권리,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중국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평가도 존재
- 콜롬비아 법대의 브래드포드(Bradford) 교수는 EU 위원회가 유럽이 뒤처져있는 동안 AI 기술을 이미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기업과 비교하여 유럽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언급
- 미국 컴퓨터 및 통신 산업 협회(CCIA) 부회장인 Christian Borggreen은, 그러나 EU가 규제만으로 AI 분야에서 리더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

12) AI타임스(2021. 8.18.), EU 집행위 AI 정책 초안을 둘러싼 AI업계 논란, "혁신을 위협하는가, 아니면 허점투성이 법안인가"
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1. 5.), EU 인공지능 규제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HUMAN RIGHTS WATCH : AI 법안은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14]

o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는 EU의 AI 법안이 사회 보장과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

[참고] 각국 정부의 사회 보장 AI 활용 방식과 인권침해 비판

- 아일랜드에서는 고용 사회 보호부(DEASP)에서 복지 혜택 신청자가 정부 발급 신분증인 공공서비스 카드(PSC)를 사용하여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구
  - PSC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신원 및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고 지역 복지센터에 방문 예약을 잡아야 함
  - 방문 시 복지센터는 신청자에게 보안 질문을 하고, 사진을 찍음으로써 타 신청자의 사진과 비교하여 두 번 이상 또는 다른 ID로 등록하지 않았는지 확인
  - 인권단체인 아일랜드 시민 자유 위원회는 신원 확인을 수행하는 데 얼굴 이미지와 같이 필요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DEASP를 비판
  - 미국 국립과학기술연구소(NIST)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안면인식 기술이 백인 남성보다 피부가 어두운 여성에서 정확도가 떨어짐을 발견하여 부정확성을 지적하였으나 DEASP는 소프트웨어 정확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전 유엔 극빈 및 인권 특별보고관은 신원 확인 절차가 혜택에 접근하는 데 높은 장벽을 만들어 침해적이고 배제적이라고 우려
- 네덜란드에서는 사람들이 사기를 칠 가능성을 예측하는 점수를 매기는 프로그램인 SyRI(System Risk Indication) 개발 및 승인
  - SyRI의 알고리즘은 고용기록, 복리후생 정보, 개인 채무 보고서, 교육·주거 이력 등 정부기관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분석
  - SyRI는 개인에 대해 복지 혜택이나 세금 등에 대한 사기 위험 정도를 프로파일링해 정부 기관에 통보했으며, 최대 2년의 기간을 두고 범죄행위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시행
  - 정부가 저소득층 국민을 프로파일링하기 위해 사용한 SyRI는 가난한 사람들과 소수 인종을 차별하는 것으로 거센 비판을 받음
  - SyRI가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네덜란드 법원 판결로 정부의 사용이 중단되었으나, 시민단체들은 사기 위험 점수 사용을 되살리기 위해 공공 및 민간부문의 데이터 공유를 허가하는 법안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임
- 오스트리아의 공공 고용 서비스(AMS)는 성별, 연령, 국적, 건강, 직업 및 직장 경험 등의 요인에 따라 구직자의 취업 가능성을 예측하는 AI 알고리즘 사용
  - AMS는 중간 수준의 취업 가능성을 가진 구직자에게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취업 전망이 상당히 낮거나 높은 구직자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취업 기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지원을 축소
  -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 알고리즘이 30세 이상 여성, 육아 중인 여성, 이민자, 장애인에 대해 취업 가능성을 평가절하한다는 사실을 파악
  - 이는 그들의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는 능력과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지적
  - 또한, 이 알고리즘은 구직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취업률을 취업 가능성 지수에 반영하는데, 특정 국가의 낮은 고용률은 소수 인종 또는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수는 구직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

- EU의 AI 법안은 위와 같은 위험을 폭넓게 인정하지만 사회 보장 및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를 의미 있게 보호하지 않는다고 지적

  ※ 아일랜드의 PSC와 같은 안면인식 기술은 '공공장소에서의 얼굴 이미지 실시간 수집 및 분석'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하지 않고 '고위험' 시스템으로 분류

- 특히, AI 법안의 '좁은 보호 장치'는 디지털 격차, 노동 시장 차별과 같은 기존의 불평등과 권리보호의 실패가 어떻게 AI 시스템에 내재하여 있는지 간과하고 있음을 경고

- 고위험 시스템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 인권 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

14) HUMAN RIGHTS WATCH(2021.11.10.), How the EU's Flawed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 Endangers the Social Safety Net: Questions and Answers